

촛불의 운동정치와 87년 체제의 '이중 전환'

권영숙*

이 글은 2016년 박근혜 퇴진 운동 속에서 촛불시위의 운동정치(movement politics)를 규명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한다. 관련하여 이 글은 두 가지 전제를 제시할 것이다. 첫째, 박근혜 퇴진 운동과 촛불시위는 구분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는 촛불시위와 박근혜 퇴진 운동에 등장하는 다양한 복수의 이질적인 행위자들의 구성과 그들 사이의 운동정치에 주목해야 한다. 이 논문은 역사사회학과 사회운동론의 이론적 자원에 기초하여 박근혜 퇴진 운동 속에서 촛불의 운동정치를 분석한 후, 박근혜 퇴진 운동은 혁명이 아니라 사회운동론에 있어서 '이슈 캠페인'과 '항의 사이클'의 두 가지 성격을 가진 동원형태로 규정한다. 후반부는 촛불의 운동정치와 87년 체제의 이중적 관계성에 대한 분석이다. 박근혜 정부가 등장한 후 거의 붕괴 직전에 이르른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위기는 사실 두 가지가 혼재된 위기였다. 그 하나는 국정농단과 권력의 사유화로 인해 대의제 민주주의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위기, 다른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적 정치 전환과 이어 진행된 경제적 전환의 이중 전환(double transformation)의 내부적 한계에 따른 위기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 민주주의의 위기는 중첩돼 있고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결론적으로 2016년 퇴진 촛불시위는 87년 체제를 통해서 87년 체제의 위기를 봉합하는 제1단계의 기획에 성공했다. 이로써 87년 체제는 다시 회복됐다. 하지만 87년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제2단계의 기획에 성공할 수 있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yskweon@yahoo.com

DOI: <http://dx.doi.org/10.18207/criso.2018..117.62>

을까? 혹은 과연 87년 체제의 정치적 자유화와 경제적 자유화의 이중 전환을 넘어서는 새로운 전환은 무엇일까? 달리 말하면 2016년 촛불은 87년 체제의 재공고화인가 아니면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전환의 시작인가? 이것이 촛불이후 제기되어야 할 마지막 질문이다.

“혁명의 정의와 관련한 딜레마는, 오늘날 계속 출현하는 반혁명 담론이 ‘혁명의 환영(revolutionary illusions)’으로의 귀환에 대해 사회, 경제, 그리고 ‘민주적 제도들’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언급하고 이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의 이데올로기 전쟁을 감행해야 한다는 듯이 언급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런 모든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혁명’이라는 아이디어의 계보학과 근대에서 그것의 용법에 대한 주의 깊고도 비판적인 검토이다. 즉 어떻게 혁명이라는 아이디어가 ‘구성되고’, 어떻게 그것이 또한 다른 용법들을 위해 ‘해체’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줌으로써 말이다”(Balibar, 2017).

1. 정의를 둘러싼 문제: 역사적인 상징투쟁으로서의 사회운동

2016년 10월 말부터 장장 4개월간 지속됐던 박근혜 퇴진 운동과 그것을 주도한 ‘촛불시위’를 우리는 무엇으로 정의하고 호명할 수 있을까? 그것을 흔히 ‘촛불혁명’ 혹은 ‘촛불시민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문의 여지 없이 자명한 것일까? 하지만 특정한 사회운동에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호명하는 행위, 그리고 나아가 그 호칭 자체는 자명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자체가 역사를 상징화하는 담론 투쟁의 일부이다.

사실 사회운동은 그 자체로서 역사적인 상징투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회운동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 즉 집합행위 레퍼투아르(collective action repertoire), 문제에 대한 진단과 프레임(frame), 행위주체의 구성과 정체성의 정치 등이 모두 역사적 상징투쟁의 속성을 지닌다. 우선 특정한 사회운동이 선택하는 집합행위는 단지 일회적이고 고립된 행위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축적되고 사회적으로

공유된, 그래서 가능한 집합행위들의 목록 가운데서 결정된다. 문제에 대한 진단과 투쟁 슬로건의 구성 및 그를 포괄하는 운동의 프레임도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에 놓여 있으며, 문화적 인지적인 집단 습득과 공유의 산물이다. 또한 운동의 주체와 행위자를 구성하고 배치하는 것 역시 역사적이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맥락과 관계의 지형 안에서 이뤄진다.¹⁾

무엇보다도 사회운동을 어떻게 호명하는가는 치열한 역사적 상징투쟁이 된다. 운동 혹은 대중적인 시위의 연쇄가 끝난 후에 그 투쟁을 무엇으로 규정하며 어떻게 부를 것인가는 때로는 자연스럽게 명확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회적·정치적 상징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은 화해롭기보다는 갈등하고 경쟁하는 정의들 간의 투쟁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혁명의 긴 과정에서 발발한 ‘대사건들’을 둘러싼 성격 논쟁들, 서구의 ‘68년 혁명’에 대한 논의 등이 그러하다. 한국의 4·19나 5·18 등 중요한 현대사의 대사건들도 처음에는 ‘사태’나 ‘사건’ 등 의미가 없는 혹은 비하적인 호칭으로 불리다가 점차 의미를 부여하는 투쟁을 거치면서 ‘의거’, ‘항쟁’, 나아가 ‘혁명’으로 이름이 점차 진화했다. 이렇듯 모든 사건의 역사는 그 사건을 호명하고 기억하는 상징투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2016~2017년 박근혜 퇴진 시위운동과 그것을 주도한 ‘촛불시위’는 무엇으로 정의하고 호명할 수 있을까? 그러나 바로 1년여 전에 벌어진 대중시위에 대해서 정확하고 적절하게 정의 내리고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시기상조이며, 설부른 작명이 될 위험성이 크다. 대부분의 역사적인 ‘대사건들’과 사회운동 현상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한편으로 그 성격에 대한 학문적인 분석과 규명이 다각도로 이뤄지고, 다른 한편으로 대중적인 집합기억의 축적 경험을 통해서 일정한 사회적인 합의에 이르면서 사건에 대한 어떤 정의가 내려지고 호칭이 정착하였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지금 2016년 박근혜 퇴진 운동 및 촛불시위에 대해서는 채 2년도 되지 않아 그 성격에 대한 성급한 일반화, 나아가 그 사건의 명칭에

1) 사회운동을 구성하는 핵심 구성요소들인 집합행위 레퍼투아르, 운동의 프레임, 행위주체의 구성성에 대해서는 권영숙(2017b)의 문헌 리뷰를 참조.

대한 단선적인 정립이 시도되고 있다. 박근혜 퇴진 운동의 성격과 의미에 대한 학문적·사회적 논의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촛불시위를 ‘촛불혁명’이나 ‘촛불시민혁명’으로 규정하고 명명하고 나아가 이를 굳히려는 시도가 바로 그것이다. 촛불시위의 경과와 내용,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상관없이 그것을 ‘혁명’으로 호명하고 그 호칭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뿐 아니라 박근혜 퇴진시위와 주말 촛불집회에 참가한 행위자들을 ‘촛불시민’이라는 하나의 단일한 주체(agency)로 호명하려는 것도 비슷한 현상이다. 박근혜 퇴진 시위운동은 주말 촛불집회로만 환원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퇴진 시위는 어느덧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규정되고 나아가 참가자들은 통칭하여 ‘촛불시민’으로 규정되고 있다.

물론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즉 박근혜 퇴진 운동과 촛불시위는 1987년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발견했던 혹은 발명했던 ‘시민’을 2016년 ‘촛불시민’이라는 이름으로 극적으로 재소환하였다. 그들 ‘시민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외치고, 자신들이 민주공화국의 시민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음을 증명하려는 듯했다. 이는 국정농단을 일삼으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킨 대통령 박근혜 및 최순실 세력 대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주창하고, 국가의 정상화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하는 ‘민주시민들’의 이분법적인 구도로 현현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는 촛불시위 전 과정에서 자기 검열을 하며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를 재현하려고 애쓰는, 즉 ‘시민 됨’을 갖춘 촛불시민 대 폭력적인 시위대의 이분법적 구도로 나타났다. 그렇게 자기 증명하고 스스로의 ‘시민 됨’을 재발견하면서 새롭게 탄생한 촛불시민은, 말하자면 일종의 자기 통치성의 기예를 촛불시위 과정에서 맘껏 펼쳤다. 시위용 ‘퍼포먼스’와 집단적인 율동 등 ‘표현적’인 행위가 물리적인 충동을 압도하고 사라지게 만들었다. 미셸 푸코의 표현을 빌자면 한마디로 ‘시민적 기예’가 통치성과 자기 기율의 요소로 자리 잡았고, 이것은 역으로 촛불시민의 자기 숭배, 나르시시즘으로 귀결되고 있기도 하다. ‘촛불시민’은 사실은 주말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스스로 상상하고 만들어낸, 가상의 ‘집단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촛불시위 참가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특정한 시민성으로 구성함으로써 촛불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나아가 스스로에 대한 신성화 혹은 자기 숭배에 이르게 되었다.²⁾

그런 점에서 촛불시위를 둘러싼 역사적 상징화의 투쟁은 현재진행형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촛불시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는 것 자체가 정치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 지점에서 오히려 학문적으로 질문되어야 할 것은 박근혜 퇴진 운동과 촛불시위는 왜 ‘혁명’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이 운동의 성격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채 이뤄지기도 전에 ‘촛불혁명’ 혹은 ‘촛불시민혁명’이라고 너나없이 부르고 일반화하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 사회운동 현상이기 때문이다.³⁾ 더구나 이 ‘혁명’은 제도적인 중단도, 사회정치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나 개조도 없이 이뤄졌다.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은 ‘혁명’이라고 불러야만 했을까? 왜 이것이 촛불 ‘혁명’이라고 불리게 됐는가를 질문하고 해명하는 것이 사회과학적으로 의미심장한 질문일 수 있다.

이 글은 박근혜 퇴진 운동 속에서 촛불시위의 운동정치(movement politics)⁴⁾를 규명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규범적이고 당위론적인

-
- 2) 예컨대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 이후 조기 선거로 뽑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이른바 ‘문빠들’(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이르는 속어)의 비합리적인 태도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곧 촛불시민의 신성함, 자긍심에 흠집 내는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초창’을 민주노총 지도부가 일단 거부하자 가해졌던 노동의 ‘무임승차’라는 공격,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기사에 대한 용단폭격식의 댓글 비난과 재갈 물리기 등 심각한 부작용이 빚어졌다. 이에 따라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점증하고 있다. 과연 이들은 민주공화국의 ‘계몽된’ 시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촛불시위는 박근혜와 그 일당을 감옥에 가두긴 했지만, 과연 이 사회는 자유민들이 평등하게 소통하는 민주공화국의 모습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 3) 하지만 사회과학은 적어도 비사회과학적인 정치적 수사학과 호칭의 인플레이션을 배제하고, 촛불시위를 규범적이고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넘어서야 할 필요가 있다. 촛불시위에 대한 성급한 일원화나 기념비적인 자리 매김을 하기보다는, 그것이 지닌 다양하고 복합적인 측면을 분석·종합하여 엄밀하게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촛불시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름을 부여하기 전에 선결되어야 할 작업일 것이다.
 - 4) 이 글에서 운동정치 혹은 사회운동정치(social movement politics)는 사회운동들의 전체적인 구성과 부문운동들 간의 다양한 관계성을 기초로 하여 사회운동 지형 내에서 벌어지는 운동들 간의 위계와 차이, 동맹과 협업, 갈등과 경쟁 등의 동학, 나아가 그런 역동적인 관계의 장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Kwcon(2008)참조.

언명은 가능한 한 배제하려고 한다. 촛불의 자기 신성화와 촛불에 대한 낭만화를 배척하고 촛불시위를 분석할 것이다. 관련하여 이 글은 두 가지 전제를 제시한다. 첫째, 박근혜 퇴진 운동과 촛불시위는 구분되어야 한다. 박근혜 퇴진 운동의 주축은 분명히 주말의 대규모 촛불집회 및 행진이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박근혜 퇴진 운동은 다양한 양상을 보였고 주말 촛불집회로만 환원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규정되고 퇴진 운동 자체와 촛불시위는 동격화되었다. 퇴진 운동과 촛불시위를 구분함으로써 우리는 퇴진 촛불의 운동정치에 대한 복합적인 진면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는 촛불시위와 박근혜 퇴진 운동에 등장하는 복수의 이질적인 행위자들의 구성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전제하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다양한 복수의 이질적 행위자들과 주체들이 등장하는 박근혜 퇴진 운동 과정에서 어떻게 촛불이 지배적인 경향으로 전체 정조를 압도하게 됐을까? 둘째, 촛불시위 전 과정을 통틀어 제도적인 중단은 없었고 오히려 제도적인 질서(the establishment) 안에서 끝까지 이뤄졌다. 그런데 왜 그것은 굳이 혁명이 '되어야' 했을까? 셋째, 마지막으로 체제의 제도적인 중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떻게 정권의 조기 퇴진이라는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이 논문은 촛불의 상황적인 동학과 운동정치를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해명을 시도할 것이다. 나아가 박근혜 퇴진 운동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부여할 것이다.

2. 2016년 촛불과 87년 체제의 이중적 관계성

두 번째로 우리는 2016년 촛불시위를 통해서 대사건의 상황적 동학과 체제론적 시각의 관계성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이는 역사와 정치가 연결되는 순간이다. 즉 어떻게 대사건은 정치체제를 흔들고 나아가 그것의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연인원 1600만 명이 집결하며 거대한 대중동원의 파노라마를 펼쳤던 촛불이라는 '대사건'은 역사적 분수령이 되었는가?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박근혜 퇴진 운동 및 촛불시위는 87년 체제의 체제론적인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가? 둘째 그것은 이른바 87년 체제의 위기를 해소하였는가, 아니면 미봉하였는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국가의 실체가 날날이 드러났다. 민주주의는 작동 불능의 상태로 보였다. 이런 가운데 역설적으로 ‘민주공화국’의 상은 환기되었고, 민주화 이행의 주역이었던 시민은 재동원되었다. 국가도 시민도 아닌 ‘춧불시민’이 국정농단을 막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주체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과연 그것은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했는가? 다른 말로 해서 박근혜 적폐의 청산이 민주주의를 구원할 것인가?)

이 글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87년 체제의 위기의 극단적인 현상태(現狀)로 파악하며, 그것을 87년 체제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것은 87년 체제의 위기의 원인이라기보다는 87년 체제의 위기의 징후 혹은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⁶⁾ 즉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이나 권력 사유화 및 절대화,

5) 이 글에서 ‘87년 체제’는 1987년 6월항쟁으로 만들어진 1987년 헌법과 그에 따른 헌정질서를 중심으로 한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제도정당들 간의 선거를 통한 권력 창출을 유일한 ‘정치적 게임’으로 만들고, 선거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는 이 헌법체제는 한마디로 로버트 달이 말한 ‘최소주의적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한국의 민주화 이행은 ‘선거민주주의(plebiscitary democracy)’로 시작하였다. 체제 논쟁은 1997년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수립을 계기로 ‘97년 체제’라는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인가의 문제로 비화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즉 87년 체제와 97년 체제의 두 체제를 인정할 것인가, 혹은 여전히 87년 체제의 연장 속에서 97년 체제(혹은 시기)를 볼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김종엽, 2005; 김호기, 2007; 손호철, 2009). 이에 대해 필자는 하나의 체제를 인정하든, 두 체제를 인정하든 간에 상정하고 있는, 두 체제라는 개념적 분리 정립 자체를 기각하는 입장을 제출하고자 한다. 즉 1987년 헌법질서를 중심으로 한 87년 체제와 1997년 신자유주의 경제 전환을 중심으로 한 ‘97년 체제’는, 두 개의 체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자유화와 경제적 자유화를 연속적으로 확립한, 한마디로 정치경제적 ‘이중 전환(dual transformation)’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1987년 헌법은 1997년 신자유주의적 경제 전환의 정치적 정당성의 토대로 작동하고, 1997년 신자유주의적 경제전환은 1987년 헌법질서와 보수-자유 양당 정당구조 안에 놓여 있다. 최근에 와서 87년 체제에 대한 논쟁은 87년 체제의 ‘체제적 위기’에 대한 문제제기로 재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글의 기본 입장은 87년 체제의 위기가 도래했는가, 위기라면 그 위기의 본질은 무엇이고, 체제 위기 극복의 방식을 어떻게 구상하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87년 체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선 이 글의 마지막 절 상세 토론 참조

나아가 애초에 이명박과 박근혜 우파 정치세력의 연속집권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이미 도래했던 ‘87년 체제’의 위기였다.

87년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는 한편으로 민주화 이행 이후 30년 동안 있었던 정치적 민주화의 불철저함, 배제적 민주주의와 대의되지 못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한국의 민주화 이행 이후 민주주의, 즉 배제적이고 협소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안에 내장된 한계의 폭발이기도 했다. 한국의 민주화 이행 이후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수출주도 발전국가전략을 수정하지 않은 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경제적인 전환을 감행했다. 그 결과 발생했던 자본주의적 불평등과 빈부격차, 계급적인 양극화 등에 대해서 교정이나 억제하기는커녕,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펼치는 정치적 외파나 통치의 정당성 장치로 기능했다. 정치적 민주주의로 모든 것을 환원하고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로 고착되면서 민주주의의 심화로 나아가는 문제의식과 대안을 봉쇄하였다. 그 점에서 이는 ‘87년 체제’의 위기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퇴진 운동과 촛불시위는 ‘87년 헌정질서의 회복’이라는 가치를 내세웠고,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87년 헌법을 통해서 생취함으로써 87년 체제로 회귀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그다음의 기획은 87년 체제의 이름으로 87년 체제를 해소하고 포스트 87년 체제로 나아가는 것일 것이다. 어떻게 보면,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항쟁, 그리고 이후의 민주 대 반민주

-
- 6) 박근혜-최순실-김기춘의 이른바 ‘유신세력’에 의한 국정농단을 체제적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기술하는 논문들은 많지만, 대표적으로 김동춘(2017) 참조. 김동춘은 “70년대 유신회귀”, “대통령 1인통치”로 박정권을 규정하고, 박 대통령에 대해선 “정신적 지적 유아상태”와 “공사 구분없고 공적 조직 운영능력 자질의 부족”을 지적하며, 이에 따라 “권력 카르텔과 비선세력”의 농단, “국가와 공권력의 사유화”를 거치면서 “국가는 텅 빈 공간”이 되었고, 이는 일종의 “신봉건국가”이자 “악탈국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국가운영시스템은 무너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 정권을 ‘대통령 1인 통치’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모든 정권은 이해관계자들의 동맹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보면), 과연 박근혜 국정농단이 국가체제 붕괴의 원인일까? 김동춘은 글 중간에 “70년간 누적된 허약성을 가장 완벽하게 노출”했다고 표현함으로써 박근혜 정권의 실패가 한 정권만의 문제가 아님을 또한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선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있다.

구도 속에서 낭만화되고 신성화되다시피한 1987년 헌법을 ‘개헌’하거나 ‘제헌’하는 방법은 사실은 그 헌법의 이름으로 단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기도 할 것이다. 과연 그것은 성공할 것인가? 그리고 나아가 그것은 87년 체제의 한계를 딛고 민주주의를 심화시킬 것인가? 이것이 2016년 퇴진 운동과 87년 체제의 연관성 이후에 제기되어야 할, 두 번째 체제적인 질문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퇴진 운동의 성격과 촛불 ‘혁명’이라고 불리는 촛불시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연구와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3. 혁명 혹은 사회운동?

박근혜 퇴진 운동, 그리고 촛불시위는 과연 ‘혁명’인가 아니면 그것은 하나의 대규모 대중동원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운동인가? 이 글은 가장 먼저 현재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당연시되는 ‘촛불혁명’ 혹은 ‘촛불시민혁명’이라는 호칭에 대한 정의적·개념적 해체부터 시도하려고 한다. 규범적이고 주관적이며 상식화된 견해가 아니라, 역사사회학과 사회운동론의 이론적 자원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2016~2017년 퇴진 운동과 촛불시위를 사회운동 현상으로써 분석하고, 나아가 사회운동적인 유형을 정의하고자 한다.

1) 혁명의 정의

역사사회학자인 테다 스카치폴에 따르면 “혁명은 한 사회의 국가 및 계급구조의 급격하고 기본적인 변혁이 아래로부터의 계급반란(class revolt)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Skocpol, 1979). 이에 따라 스카치폴은 혁명을 사회혁명과 정치혁명의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즉 혁명이나 아니냐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국가 및 계급구조”의 두 차원에서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래로부터의 계급반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또 다른 혁명의 정의는 찰스 틸리에게서 볼 수 있다. 틸리는 혁명 혹은 혁명적

운동과 사회운동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 구분은 2016년 촛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혁명운동이 정치체(polity)의 경계선 혹은 외부에 존재하며 정치체의 규범과 제도적 규칙을 부정하고 전복하려는 안티테제로서의 운동이라면, 사회운동은 정치체 내에서 권위(the authority)에 대해 ‘도전’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혁명운동과 구별된다. 또한 사회운동은 3인 이상이 합리적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체제의 권위에 저항하는 집단행위를 지속적으로 벌이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이고 무계획적인 소요나 폭동과도 구별된다(Tilly, 2007).

혁명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에티엔 발리바르(2017)의 논지를 좀 더 검토해 보면, 혁명 혹은 ‘혁명적 순간’은 세 가지 요건으로 구성된다. 첫째, 사회적 권력이 그것을 독점하던 집단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주변화된 집단으로 이동하는 권력 분포의 변화, 둘째, 긴 시간 혹은 한 시대(epoch)로 구획할 만큼 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형태 혹은 사회체제의 이행의 발생, 마지막으로 현존하는 법적·제도적 통치성(governmentality)과 관련하여, 기존의 정치적 결정 규칙과 대표체제를 중단시키는 ‘예외의 순간(a moment of exception)’이 도래하는 것.⁷⁾ 이 가운데 앞의 두 가지는 혁명의 성격 혹은 혁명의 결과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 요소는 혁명의 ‘상황적 동학’에 대한 규정이다.

그렇다면 과연 2016년 10월 29일 시작되어 2017년 4월 15일까지 22차례 일어난 대규모 주말 촛불행동, 나아가 박근혜 퇴진 운동은 ‘혁명’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찰스 틸리의 구별 기준으로 봤을 때 2016년 박근혜 퇴진 운동과 촛불시위는 혁명 혹은 혁명운동인가? 또 발리바르의 요건을 적용했을 때, 우선 그것은 사회적 권력의 이동에 있어서 급진적인 변화를 야기했는가? 둘째로 그것은 국가 혹은 사회체제의 변혁을 이뤘는가? 마지막으로 그것은 현존하는 통치성의 중단을 가져온, 말하자면 ‘광기의 순간’을 경유하였는가?

7) 여기서 세 번째 요소는, 아리스티드 졸버그의 유명한 개념이기도 한 ‘광기의 순간(moment of madness)’과 유사하다(Tarrow, 1993 재인용). 혁명의 순간은 명확한 일상성의 단절 혹은 파괴의 시간을 일정 시간 요한다. 하지만 박근혜 퇴진 촛불은 오히려 일상성 속에서의 축제 같은 주말집회의 지속이었다는 점에서 ‘혁명적 순간’과 명확히 대조를 이룬다.

당연히 이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답은 ‘아니다’이다. 우선, 2016년 박근혜 퇴진 운동의 주축이었던 촛불시위는 헌정질서를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복원시켰다. 그 점에서 촛불시위는 현존 정치체제를 변혁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하기 위한 시위였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망친 원인으로 ‘국정농단’을 지목하고, 이에 따라 박근혜-최순실로 표현되는 국정농단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 회복”을 외쳤던, 말하자면 체제 수호 운동이었다. 다음으로, 그것은 국가 혹은 사회체제의 변혁을 가져오지 않았다. 촛불시위는 국가를 변혁하거나 전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비정상 상태를 해소하고 ‘정상국가’화하려는 시도였다. 그것은 ‘실패한 국가(the failed state)’의 원인을 박근혜의 권력 사유화에서 찾았고, 권력을 사유화한 통치자를 제거함으로써 국가를 정상국가로 되돌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촛불시위는 일상이 있는 시위였다. 일상성을 파괴하지 않고, 주중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토요일마다 빠짐없이 22차례 개최된 집회에 지속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여 대중적인 힘으로 압박한 후 제도적인 절차를 거쳐서, 혹은 제도화된 방식으로 헌정질서를 회복시켰다. 광장의 ‘축제’로 명명되긴 했지만 ‘광기의 순간’, 혹은 혁명적인 순간은 도래하지 않았다. 이는 찰스 틸리의 혁명운동 대 사회운동의 대비로 봤을 때 분명히 혁명운동이 아니라 사회운동이다. 이것이 첫 번째 규정이다.

2) 사회운동론적 정의

그렇다면 그것의 정확한 사회운동적인 호칭은 무엇일까? 나아가 왜 그것은 굳이 혁명이라고 불려야 했을까? 2016년 박근혜 퇴진 운동과 촛불시위에 대해서 사회운동론적 시각에서 엄밀하게 정의하고 호칭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회운동론의 가장 작은 분석단위는 항의시위로서의 사건(protest event, 이하 항의시위 사건 혹은 항의시위)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운동은 단 한 차례의 ‘시위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런 일회성의 고립된 행위는 ‘사회운동’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사회운동은 미리 문제에 대한 진단과 프레임을 통해서 타깃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클레임(요구)을 정한 다음에, 그 타깃대체로 정치적 권위에 대하여 정치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집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활동

을 의미하기 때문이다.⁸⁾

또한 사회운동은 간헐적이고 불규칙적인 여러 시위 사건들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특정한 이슈나 쟁점들을 둘러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항의시위 사건들의 연쇄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사회운동론에서는 ‘시위 이슈 캠페인(protest issue campaign)’이라고 부른다. 이슈 캠페인은 어떤 집중된 시기 동안 특정한 이슈와 목표를 둘러싼, 전략적이고 주체적으로 상호연관된 항의 사건들(protest events)의 계열로 정의할 수 있다.⁹⁾ 예컨대 세월호 진상규명 투쟁이나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캠페인이나 ‘노동법 개정’ 투쟁 등이 이슈 캠페인에 해당한다.¹⁰⁾

이슈 캠페인보다 더 큰 스케일의 사회운동 단위로는 항의 사이클(protest cycle)과 항의시위 파고(protest wave)가 있다. 시드니 태로우(1993)는 유럽의 68년 혁명을 ‘항의 시위 사이클’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퍼트리샤 헵서(1998)는 ‘항의 사이클로서의 민주화’라는 논지를 전개하여 남미 민주화 이행 과정의 사회운동을 분석한 바 있다.

사회운동론에서 이슈 캠페인이라는 단위는 위의 태로우가 제시한 항의시위 사이클보다는 스케일과 범위가 약하지만, 단순하고 고립된 개별 사건들로 볼 수 없는, 동일한 주제와 목표를 향한 ‘항의시위’의 연쇄 및 클러스터를 포착할 수 있게 한다. 반면 항의시위 사이클은 특정한 주제의 항의 시위들의 연쇄가 발현하고 전개 과정을 거쳐서 어느 범위까지 ‘전파’되고 ‘혁신’하면서 진행되고 진화하는가의 전 시기와 공간적 범위를 넓혀서 바라보게 한다. 68년 혁명의

8) 이 점에서 사회운동은 근대 국가의 형성과 함께 국민정치가 가능해지고 정치사회가 구성되면서 함께 등장하게 되는 ‘근대적 발명품’이라고 지적되기도 한다(Tilly, 1984).

9) 이슈 캠페인의 개념 및 이론화와 관련해서 *Mobilization*[Rucht and Koopmans(ed.), 4(2), 1999] 특집호를 참조할 것. 또한 della Porta and Rucht(1998), Koopmans and Statham (1999)도 참조.

10) 이슈 캠페인은 주로 ‘사건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그 이슈 캠페인을 구성하는 사건들의 연쇄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운동의 집합행위 레퍼투아르, 프레임, 행위자 구성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이를 ‘사건분석(protest event analysis)’이라고 하는데, 필자는 박사논문에서 한국 사회운동의 시위 특징에 맞게 시위사건을 재정의한 사건 카탈로그를 만든 후에 이를 1987년 이후 민주주의와 노동운동의 동학에 대한 사건 분석에 활용한 바 있다(Kweon, 2008; 권영숙, 2010).

전 지구적인 전파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월스트리트 점거(오큐파이)운동의 전 지구적인 확산 등은 좋은 사례 연구다. 반면 항의시위 파고는 가장 넓은 범위의 사회운동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74년 포르투갈 혁명에서 시작하여, 1985년 필리핀 ‘피플스 파워’ 민주화, 1987년 한국의 ‘6월항쟁’, 그리고 소비에트 붕괴와 동유럽 등의 반혁명적 민주화 이행까지 전 지구적인 민주화 이행의 파도타기 같은 흐름을 ‘제3차 민주화 파고’로 구분한 것이 대표적이다 (Markoff, 2004; Huntington, 1991).

3) 박근혜 퇴진 운동: 이슈 캠페인과 항의 사이클

사회운동론적으로 박근혜 퇴진 운동 및 촛불시위는 이슈 캠페인과 항의시위 사이클의 중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에서는 2016년 퇴진 운동에 대해 ‘촛불(시민)혁명’이라는 성급하고 과도한 규정을 폐기하고 ‘촛불항쟁’으로 고쳐 부를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즉 혁명이라는 호명이 지나치게 이념적·규범적·자의적인 정의라는 논란을 넘어서기 위해서 ‘항쟁(uprising)’이라고 부르자는 것이다. 하지만 항쟁이라고 하기에는 제도정치나 제도적인 행위자들의 개입력이 강하였고, 제도적 질서의 중단이 없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실 박근혜 퇴진 운동과 촛불 동원 사례는 사회운동이 기존의 법체계와 절차 안에서 최고권력자를 합법주의적으로 퇴진시킨 매우 특이한 경우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사회운동의 독특한 사례로 분석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2016년 10월 말에서 2017년 4월에 걸쳐 있으며 주로 토요일 광장집회와 행진으로 지속됐던 대규모의 촛불집회 대중동원은 일련의 시위 사건들의 연쇄라는 점에서 그리고 박근혜 퇴진 혹은 탄핵이라는 특정한 이슈를 중심으로 대중동원의 동학이 상당기간 지속됐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는 이슈 캠페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일적으로 하나의 이슈 캠페인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박근혜 퇴진 운동과 촛불시위는 개별적인 이슈 캠페인의 이슈로 한정되지 않는 사회적 파장을 그렸고,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투옥이라는 결과를 만들면서 지대한 정치적인 함의를 지녔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위의 시작과 정점, 그리고 끝이 있었다는 점에서 ‘사이클적

인(cyclic) 측면을 가지는 항의시위 사이클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후반부에 서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대중적 동원은 문제인 정권의 수립으로 일단락되지만, 그 정치사회적인 여파가 어디까지 진폭을 그리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예측은 하지만, 절대 예단은 할 수 없는 잠재력을 담지하고 있다고 본다. 이 점에서 2016년 촛불시위가 87년 체제, 그리고 나아가 87년 체제의 위기를 봉합했는가 다른 말로 해서 87년 체제를 이제야말로 공고화했는가 아니면 87년 체제의 위기의 극단적인 현상태를 보여줌으로써 위기의 이후의 도래 및 극복을 향한 시작인가? 이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박근혜 퇴진 운동과 촛불시위에 대해서 첫째, 사회과학적인 정의의 측면에서 혁명은 아니며, 둘째, 사회운동론적으로 보면 이슈 캠페인과 항의 사이클의 중간에 위치한 동원 유형으로 정의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런 사회과학적인 개념을 사건의 혼란 호칭으로 삼기에는 난점이 있으므로, 이 논문은 때로 (항의)시위 사이클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촛불시위 및 박근혜 퇴진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지칭할 것이다.

4. 박근혜 퇴진 촛불의 운동정치

1) 게이트를 여는 방법: 거래, 탈주, 봉기

2016년 10월 29일 토요일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열린 1차 촛불시위에 3만 명이 모였다. 11월 5일 2차 촛불시위에는 30만이 모였다. 이 2차 촛불에서 고등학생들이 “혁명을 하자”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나온 것은, 박근혜 퇴진 운동과 촛불시위에 하나의 기폭제였다. 그리고 11월 9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 결성되었고, 퇴진행동 발의 때부터 깊숙이 개입했던 민주노총 등 조직노동이 11월 12일에 열린 3차 촛불시위에 ‘민중총궐기’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참가하면서 인원은 100만 명을 넘어섰다. “박근혜 퇴진”이라는 구호를 가장 먼저 내걸었던 민주노총, 경찰의 백남기 폭력치사 사건이 발생한 ‘민중총궐기 본부’ 소속 사회단체들이 대거 참가하면서 퇴진행동은 발족 처음부

터 매우 체계적이고 좌로부터 우까지 거의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을 포괄하여 발족 시점에 이미 1,503개 단체가 참여하는 초대형 규모의 연대체로 꾸러졌다.¹¹⁾ 박근혜 퇴진 운동이 단순히 최순실 소유 태블릿PC의 언론보도로 터트려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만 한정될 수 없는 흐름 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과 문재인 당시 유력 대통령 선거 후보는 11월 12일 퇴진집회 참여 인원이 100만이 되어도 여전히 동요를 거듭했다. 그 결과 11월 13일 검찰은 박근혜 피의자 조사 발표를 하는데, 그다음 날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하였다. 이는 여전히 대통령을 국정의 파트너, 즉 집권당의 수장이자 대통령으로 인정한다는 신호였다. 심지어 민주당은 박근혜 조사계획을 발표한 검찰이나 게이트 조사를 촉구하면서 입장을 밝히기 시작한 우파 언론 《조선일보》보다 더 머뭇거리지는 형국이었다. 이어 11월 15일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거부하였고, 17일 국회에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가 개시되었다. 결국 11월 20일 여야가 대통령 퇴진의 방식을 즉각 하야가 아닌 국회에서의 탄핵소추 표결을 통해서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촛불시민들과 퇴진행동은 이런 제도정당 간에 합의된 박근혜 퇴진 방법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하여 ‘게이트를 여는 방법’은 탈주와 봉기가 아닌 ‘거래’로 관철되게 생겼다. 이러 점에서 11월 20일 여야의 ‘대통령탄핵’합의는 두 번째 기폭제였다.

2) ‘시민적 타협’에 의한 재민주화

이런 점은 박근혜 퇴진 운동이 기본적으로 ‘87년 체제’를 태동시킨 1987년 6월항쟁의 제도정치-사회운동정치의 동일선상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행은 6월항쟁이란 대중동원을 배경으로 야당 세력이 권위주의 집권 세력과 밀실거래를 통해서 ‘6·29 선언’의 8개 민주화 이행 조항에 합의하면서 수습 국면으로 돌입하였다. 이를 이행론에선 ‘거래(deal)에 의한 민주화’라고 규정

11) 《민중의 소리》, 2016년 11월 9일 자, <http://www.vop.co.kr/A00001087219.html>. 퇴진 행동에 따르면 퇴진행동의 막바지에 이를 때까지 ‘퇴진행동’ 참가 단체 수는 3,000개에 육박했다(홈페이지, <http://www.bisang2016.net/>).

한다. 하지만 거래에 의한 민주화 유형도 사회적 제 계급세력 간의 힘에 기초한 타협에 의한 이행 방식인 ‘사회적 협약(pact)에 의한 민주화’와 ‘엘리트 협약에 의한 이행’의 두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이 가운데 엘리트협약에 의한 이행은 구정치세력을 일소하지 않고 선거민주주의의 게임에 상호합의하여 최소 민주주의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변형주의 전략(transformism)’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최장집, 1996; 조효래, 1995). 1987년은 6월항쟁이라는 대규모 대중동원 혹은 ‘항쟁’에도 불구하고, 사회 제 세력 간의 ‘사회적 협약’을 맺지 못하고 제도정당 엘리트 간의 협약으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2016년 박근혜 퇴진 시위 역시 대중동원의 힘에 기초하여 제도정당들 간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방식의 제도적인 절차를 밟기로 합의하는 거래로 귀결되었다. 하지만 이번의 여야 합의가 1987년과 다른 점은 광화문 광장을 메운 촛불시민들과 광장집회를 주최한 ‘퇴진행동’이 암묵적으로 이러한 제도적인 엘리트 간 협약을 묵인 혹은 인정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이를 엘리트 간 밀실탈협이 아니라, 일종의 ‘시민적 타협(civic compromise)’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2016년 박근혜 퇴진 운동은 시민사회 및 사회운동세력과 제도정당들 간의 사회적 협약은 아니지만, ‘촛불시민’이라고 불리는 다중 주체의 암묵적인 혹은 공공연한 승인을 통해서, 즉 시민적 타협을 통해 정치적인 결과, 즉 박근혜 퇴진을 통해서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러한 ‘시민적 타협’이야말로 퇴진 운동과 촛불시위의 전체적인 모습을 특징 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16년 퇴진 촛불에서 ‘촛불시민’이라는 주체 구성이 유의미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한 ‘시민참여적 거래’ 혹은 ‘시민적 타협’을 통해서, 촛불시민들은 대규모 주말 촛불집회 이상의 급진적인 행동을 시도하지 않았고, 그 결과 대통령 탄핵과 조기 선거라는 ‘손으로 쥐어볼 수 있는’ 정치적 성과를 이뤘다.¹²⁾ 앞서 두 번째 질문, 즉 혁명이 아니고 제도적

12) 박근혜 퇴진 운동과 촛불시위 전 과정을 지배한 밑바닥 정조 중의 하나는, “죽 썬서 누구 출까”였다. 이는 1987년 6월항쟁이 전 집권당 권위주의 세력의 계승자인 노태우의 대통령 선거 당선으로 귀결된 참담한 결과를 다시 반복하지 말자는 언명이자 학습된 효과였다. 그러므로 2016년 촛불시위는 처음부터 완화된 요구, 실현 가능하고 획득 가능한 요구에 대한 압박을 지니고 출발하였다. 또한 이미 2017년 12월로 예정된

질서 안에서 끝까지 이뤄졌지만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낸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과정의 성격은 이후의 촛불시위의 구호들의 자기 충돌적이고 모순적인 성격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마디로 12월 9일 탄핵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절차를 앞두고서 외친 “즉각 퇴진하라”라는 구호는 이미 국회 탄핵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한 퇴진이라는 시민적 합의와는 상호 충돌적이고 모순된 구호였다. 이리하여 국회 탄핵 가결 이후 지루한 헌법재판소 공방이 전면에서 부각되고 촛불이 뒤로 물러났게 된 상황이 후반부를 지배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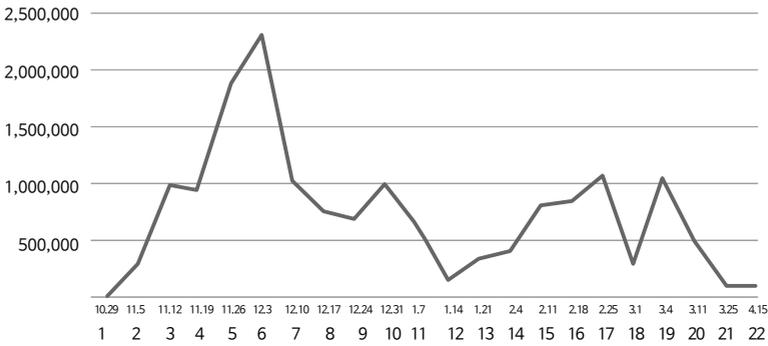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촛불시위의 동원 궤적을 살펴보면, 11월 20일 여야의 ‘탄핵에 의한 퇴진’ 합의와 이어서 11월 26일 법원의 청와대 100미터 앞 행진 허가로 190만 명이 집결하면서 주말 촛불은 최고조의 정점에 도달했고, 이후는 줄곧 하강곡선을 그린다. 주말 촛불집회 동원 규모 그래프를 보면, 단 하나의 정점(봉)을 찍고, 이후는 단순한 주말 동원을 반복하는 추이를 그리고 있다.

촛불시위의 상황적 동학은 궤적 전체를 보면 예상과는 달리 그다지 역동적이지 않았다. 사실은 ‘판세’는 초기에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고, 주말 촛불 3·4차에서 이미 시위 역시 정점을 찍었으며, 이후의 상황은 예측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2016년 촛불시위는 11월 26일을 동원의 최고 정점으로 기준으로 한 전반부 1단계와 후반부 2단계로 나눌 수 있다. 즉 촛불시위, 나아가 박근혜 퇴진 운동의 전반적인 기조가 긴장 속에서 결정된 것은 사실 주말 3·4차 집회였고 11월 20일 여야 탄핵합의는 주말집회의 밑그림이자 앞으로의 방향타가 되었다(<그림 1> 참조).

결국 촛불시위에 있어서 연인원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계열적인 동원의 궤적에 따른 질적인 변화이고, 특히 변곡점이 어떻게 어느 지점에서 어떤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가이다. 촛불 항의시위의 시간대별 궤적을 보면 초기 3·4회

대통령 선거와 탄핵 이후 조기 실시될 선거는 이미 2017년 박근혜 퇴진 운동을 선거에서의 정권교체와 등식화하는 상황적인 조건이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숨겨진 질문은 과연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는 불가능했을까 하는 것이다.

〈그림 1〉 범국민행동 주말 촛불집회 동원 규모



주말 촛불이 퇴진 운동의 방향을 거의 결정지었다. 22회의 대규모 동원 구조였지만, 사실 처음 3·4주차에서 항의시위 사이클의 윤곽은 거의 확정되었다는 뜻이다. 혹은 달리 표현하면, 3·4주차 집회에서 새로운 질로 도약을 시도하거나 확장하지 않았으므로써 그 경향성은 굳어졌다는 것이다.¹³⁾

그리고 드디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가결하고 박근혜와 그 일당 등이 차례대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 구속되었다. 이리하여 한국의 헌정질서는, 아니 87년 체제는 국정농단세력을 제거하고 다시 정상태로 복원되었다. 2016년 촛불시위는 87년 체제 헌정질서 시수를 기치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체제 보수적인 운동이었고, 87년 체제를 규정하는 1987년 헌법으로서 대통령 탄핵을 진행함으로써 87년 체제를 지켜냈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재민주화라고 규정할 수 있다.¹⁴⁾

문제는 과연 이 시스템에 모두, 혹은 촛불 모두 만족하는가이다. 그리고 과연

13) 시드니 태로우(1998)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운동의 아이러니는 항의의 사이클 자체가 그 항의 행동의 종말을 가져온다는 점, 항의의 사이클은 결국 항의-개혁-공고화-후퇴 (retreat)라는 사이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14) 필자의 시각과 유사한 논점을 제기한 이로는 법학자 이국운(2017)이 있다. 그는 촛불시위를 “87년 체제의 퇴행을 87년 체제의 최대한을 동원하여 막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일대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일당으로 좁혀진 ‘적폐’에 대한 청산으로 현실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이다. 촛불시위의 상황적인 동학의 전개 과정을 보면 이 지점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3) 박근혜 퇴진 운동의 기본 특징

사회운동론이 가지는 강점은 매우 자명해 보이는 사회운동 현상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현상에 대한 ‘판단 유보’를 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운동 현상은 그 자체만으로 이미 ‘규범적인 구성체’의 성격을 지닌다. 이에 따라 행하는 것과 행해진 것 사이의 간극, 외친 것과 얻은 것 사이의 간극,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간극은 생각보다 크다. 이는 특히 사회운동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연구자들의 주관적이고 주의주의적인 입장과 편견에 기초하여 더욱 증폭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위의 논지를 논증하기 위하여 사회운동론의 핵심 요소들인 행위자 구성, 집합행위 레퍼투아르의 특징, 운동 프레임의 세 측면에서 2016년 퇴진 운동을 촛불시위 중심으로 토론하기로 한다.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 혹은 항의시위 사이클은 어떤 행위자, 집합행위, 프레임으로 구성되는가? 촛불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2016년 촛불시위에 대한 상식은 과연 상황적인 역학과 궤적에 대한 분석과 일치하는가?

이 질문들과 관련하여 이 논문이 촛불을 바라보는 기본 시각을 명시하고자 한다. 첫째, 박근혜 퇴진 운동과 촛불시위는 상호 구별하여야 한다. 박근혜 퇴진 운동은 처음부터 ‘촛불’이라는 집합행위 혹은 집합적 행위자로 시작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 퇴진” 혹은 “사퇴하라”라는 구호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13년 11월 22일 천주교 전주교구 신부들의 십자가 거리행진에서였다. 천주교 사제들은 군산 수송동성당에서 ‘불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미사’를 열었다.¹⁵⁾

15) “고집불통 독재 모습… 대통령 아님 선언”, 《오마이뉴스》, 2013년 11월 22일 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

그러나 시민운동조직들은 “박근혜 사퇴” 주장에 그다지 호응하지 않았고, 민주노총도 2015년 ‘정권 퇴진’이라는 구호를 사용하는 데 주저하고 있었다. 천주교 신부들에 이어서 2015년 11월 민주노총 내 정리해고·비정규직 사업장 노조들이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쟁취!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박근혜 퇴진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라는 이름의 공동행동을 구성하였다.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서도 퇴진 주장은 시위대 일부에서 자연스레 터져 나오긴 했으나 전체적인 구호는 아니었다.

이렇듯이 박근혜 퇴진 구호는 촛불과 무관하게 시작하였는데, 어떻게 촛불시위라는 ‘집합행위 레퍼투아르’가 박근혜 퇴진 항의시위 사이클 전체를 지배하는 정조 혹은 정의가 되었는가? 결국 촛불이 박근혜 퇴진 운동 내에서 중심화되고,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나아가 전체를 호명하는 이름이 되어갔던, 실천과 담론의 양면의 운동역학, 혹은 운동정치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실제의 박근혜 퇴진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촛불시위를 배치하여 바라볼 필요가 있다.

둘째, 박근혜 퇴진 운동은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집합행위들로 분출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운동론의 개념을 원용하자면 박근혜 퇴진 항의시위 사이클은 일종의 ‘다조직적 사회운동의 장(multiorganizational social movement field)’에서 복수의 행위자들의 구성주체에 의해 진행됐다고 할 수 있다.¹⁶⁾ 복수의 이질적이고 심지어 경쟁적이기까지 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시위주체였다.

나아가 이 다조직적인 사회운동의 장에는 시위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사실 사회운동을 해명하는 데 있어서는 직접적인 시위 참가자, 시위의 장소에서 움직이는 이들뿐 아니라, 그 주변의 구경꾼들,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의미가

1929399&CMPT_CD=P0001.

16) 사회운동론에서 ‘다조직적인 사회운동의 장’ 개념은 주로 ‘사회운동조직’ 연구자들이 도입하고 사용하는 이론적인 자원이다. 이들은 사회운동조직들 간의 다양한 갈등적·협조적인 관계 맺음과 ‘동맹’의 구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운동 연구에 ‘장(field)’ 이론을 도입하고, 사회운동의 장은 기본적으로 개별 조직만이 고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다조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관련하여 McAdam and Fernandez (1988), Evans(1997) 참조.

있다. 나아가 시위를 보도하는 언론, 시위에 개입하는 국가기구와 공권력 등은 주요한 [반(counter)]행위자로 작용한다. 그러나 촛불시위의 경우 국가기구 그리고 제도정당 등 행위자들이 반행위자가 아니라 항의 시위 사이클에 순응적이거나 적극 수용적인, 나아가 개입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 특이하며, 이 점이야말로 이전의 반정부 시위들과 2016년 촛불시위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이다. 이에 대해선 위의 퇴진 운동의 궤적에서도 이미 드러났다. 그렇다면 왜 검찰, 경찰, 법원, 심지어 언론은 촛불시위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을까?

마지막으로 가장 멀리 있는 그러나 중요한 행위자, 부작용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개입을 했던 두 행위자가 있다. 바로 미국과 자본이다. 미국은 한국의 정권이 헌정질서를 일시 중단하면서 교체되려는 국면에서 대통령 임기를 조기 단축하는 탄핵 시도에 대해서 묵인·방조하다시피 했다. 또한 자본은 가만히 상황의 전개를 지켜볼 뿐, 박근혜 정부를 비호하거나 방어하는 혼한 성명서 하나 제대로 내지 않았다. 이들 두 행위자는 왜 박근혜 퇴진 운동에 대해서 침묵 혹은 묵인했을까?

셋째, ‘동원 구조(mobilizing structure)’와 동원 전략의 문제이다. 박근혜 퇴진 운동의 중심축이었던 토요일 주말 ‘세월호 광장’ 집회의 동원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언론도 주최 측도 증가하는 시위 규모를 강조했고 매주 토요일 켜지는 촛불의 규모가 그 전주의 기록을 갈아치울지는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연인원 1600만 명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이른바 ‘3.5%의 법칙’이라는 뜬금없는, 이른바 시위 규모의 정치학이 돌면서 시위 참가자들을 고무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인원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따른 변화이고, 질적인 변화이고, 특히 변곡점이 어떻게 어느 지점에서 어떤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가이다. 이에 대해선 위에서 미리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이 항의시위 사이클의 동원 전략은 기본적으로 주말 집중 대규모 동원 전략이고, ‘촛불’을 손에 드는 비폭력 평화시위였다. 이러한 동원 전략은 2016년 박근혜 퇴진 운동 전체를 지배한 집합행위로 자리 잡았지만, 촛불의 진화라는 점에서, 최초의 촛불시위라고 할 수 있는 2002년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미선·효순 두 중학생 죽음에 대한 항의시위와 비교해서 큰 변화였고, 분명히 차별적이었다. 미선·효순의 죽음에 대한 항의 촛불은 소규모였고 2008년 광우병

반대 시위를 촉발한 ‘이명박 OUT 촛불’ 역시 처음에는 ‘사회적 원자들’의 광화문 밤샘 촛불로 시작했다. 하지만 2016년 촛불은 ‘퇴진행동’이라는 초대형 연대조직이 집회 주최기관으로 구성돼 있었고, 촛불이라는 비폭력적, 물리력을 배제한 주말집회 형식의 ‘시위’는 전체적인 동원 규모를 확대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반면에 부정적인 면들도 있었다. 사회운동론에서 동원 전략은 동원 규모와 상호 제한하는 성격이 있다. 물리적·폭력적·대립적인 집합행위를 선택할수록 탄압이 비례하여 증가하고 이에 따라 동원 규모는 축소된다. 하지만 일정한 물리적인 충돌의 분기점을 넘어서고 힘관계에 동요가 생기면, 이런 동원 전략은 오히려 동원 규모를 급증시키기도 하고 체제를 전복하는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동원의 규모와 전략, 결과는 이렇게 상관적이고 유동적이다.

2016년 박근혜 퇴진 운동이 선택한 촛불이라는 집회시위의 양식은 동원 규모 면에서 엄청난 확장력을 분출하였지만, 그 동원 전략상 타격을 향하는 데 있어서는 애초부터 자기 제한적 동원의 정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런 동원 전략에서는 집합행위의 급진화·탈제도화가 쉽지 않다.

5. 사회운동론적 분석: 행위자, 프레임, 집합행위

1) 행위자 구성: 촛불은 누구였나?

촛불은 과연 누구였나? 우선 박근혜 퇴진 주말집회를 보면, 집회 참가자들은 이질적이고 다양했으며,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 있었다. 주말 촛불시위에 여러 사회집단들이 골고루 참여하였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럴 수 없었다. 일단 주말 토요일 집회라는 형식은 주5일제 근무에서 제외된 다양한 노동자들, 시간제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참여가 불가능한 물리적인 조건이었다. 촛불 집회에 참여 가능하고 참여하기도 했던 노동자들은 주로 주 5일 근무하는 정규직 사무직 제조업 노동자들, 특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 조합원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축으로는 전문직, 청년학생들, 전업주부들이 있었다. 또한 서울과 지방의 참가 규모를 보면, 시간이 갈수록 현저하게 서울 중심 집회로

집중되었는데, 이것 역시 2008년 광우병과 다른 점이다. 2016년 촛불이 주말집회 위주로 4개월간 이어졌지만, 일상성의 정치라는 점에서는 2008년 광우병 반대 시위만큼 일상의 중단, 혹은 일상을 흔드는 효과는 미치지 못했다. 또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은 줄곧 광장의 중심이 아닌 주변부에서 자신들의 집회를 열었다. 예컨대 ‘페미니스트’ 집회는 주말마다 경복궁역 근처에서 따로 열렸고, 앞에 언급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 역시 별도의 퇴진 요구 집회를 주말뿐 아니라 주중에도 지속했다.

둘째, 2016년 촛불시위를 분석할 때 흔히 광화문 광장 촛불집회 주최 측은 퇴진행동과 대중의 관계에 대해 이분법적인 대립구도를 전제한다. 하지만 이번 2016년 촛불의 경우, 구체적으로는 ‘퇴진행동’과 촛불, 혹은 연단과 광장의 관계를 이분법적인 대립 구도로 간주하긴 어렵다. 그것은 연단과 광장의 분업 혹은 동원의 이중주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중의 자생성이 앞서면서 이끌었고 이에 대해 퇴진행동 등 조직운동이 끌려갔다기보다는 상호적인 분업 구조였던 것으로 보인다. 촛불 전 과정에서 광장의 촛불시민과 연단을 마련한 주최 측은 서로 배척한 게 아니라 서로 분업구조를 형성했다. 주최 측은 대중의 자생적인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는 전략을 제시하지 않았고, 때로는 대중의 동원 전략을 일정 수준에서 통제하고 관리하였다. 즉 지도가 아니라 시위를 관리하는 기관이었다. 촛불시민들 역시 2008년 광우병 반대 촛불시위에서처럼 반운동적인 혹은 운동에 적대적인 자생성과 급진성을 보이기보다 연단과 주최단체를 적절하게 서비스기관처럼 활용하였다.

그러므로 일부 학자의 분석처럼 제도화된 운동이 대중에게 끌려가고 대중이 “이끌어갔다”라는 것은 정확한 진단이 아니다. 이는 2008년 광우병 반대 촛불과 비교하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2008년 촛불이 훨씬 더 ‘반운동적’이었고, 자생성에 기초한 대중 동원이었다.¹⁷⁾ 2016년의 ‘퇴진행동’ 같은 정도의 지도력

17) 이현우·서복경·이지호의 『탄핵 광장의 안과 밖』(책담, 2017)은, 다양한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운동 대 대중의 이분법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접근은 2016년 촛불시위를 대중의 자발성이 극대화된 시위 양상으로, 2008년 광우병 반대 촛불시위를 오히려 조직된 운동이 지도력을 펼치면서 대중을 이끌어간 동원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관계와 그 해석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2008년 광우병

과 통제력을 가진 주축 측은 끝까지 만들어지지 못했고, 완전히 인정받지 못했다. 당시 그들은 제도정당은 물론이고 직업적인 혹은 전문화된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거부감과 적대감을 표현하는 등, 일종의 ‘반정치기계(anti-politics machine)’적 성격을 띠기까지 했다. 그리하여 광우병 반대 촛불시위에선 운동단체들의 깃발들이 허용하지 않았고, 개인들은 ‘사회적 원자’로서 혹은 인터넷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느슨한 동원 구조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2016년 ‘촛불 광장’에는 운동조직들과 노조들의 깃발들과 개인들의 깃발들이 혼재하였다. 이것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사실 2016년 시점의 사회운동의 다조직적인 ‘장’의 전체적인 변화와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시민운동이 신사회운동으로 등장한 이후로 운동정치는 시민운동진영과 민중운동진영의 두 진영이 때로는 각축하고 때로는 연대하던 시기를 거쳐, 1997년 안기부법과 노동법 개정 날치기 통과 반대 투쟁을 거치면서 서로 교류가 급속히 늘어나고 혼용하고 있었다(조희연, 2016). 특히 민주노총 등 노조운동과 민중운동의 제도화와 우경화가 진행되면서 시민 대 민중의 프레임 구도도 점차 희석되고, 시민운동진영과 민중운동진영이 수렴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 민중운동진영이 모든 단체들을 포괄하는 ‘전선체’ 구성에 실패하면서, 역으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단체들 사이의 차별성은 희석되었다. 이들 노동 등 민중운동과 인권, 학술 단체들, 그리고 시민운동단체들은 점차 하나의 단일한 ‘시민사회’ 혹은 ‘다조직적인 사회운동의 장’을 구성하고, 연대하고 협조하는 운동네트워크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고 필자는 진단하고 있다. 더불어 2008년 광우병 반대 촛불 당시, 기존 운동단체들에 반감을 품었던 ‘개미들’이라고 불렸던 ‘촛불시민들’이 만들었던 ‘촛불단체들’은 이후 점차 사라지거나 시민사회단체로 제도화되었는데, 이들도 대부분 퇴진행동에 참가단체로 등록하였다는 점도 주목을 끈다. 결국 이런 전체적인 ‘운동지형’의 수렴과 제도화 속에서 2016년 퇴진 운동과

촛불에서 운동 주축 측이 시위행진의 ‘시청광장’ 몰이에 대해서 자칭 ‘촛불시민’ 시위대들이 반발하면서 ‘MB OUT!’ 탄핵 촛불의 시발지인 광화문을 시수한 점, 연단의 운동단체 사회자나 정치인들에게 야유를 퍼붓는 일이 비밀비재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라.

촛불시위의 성공이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퇴진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다양한 이질적인 행위자들이 ‘복수의 조직적인 장(multiorganizational field)’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퇴진 촛불운동은 질적으로 의미 있는 대립항, 혹은 촛불 이후 운동 주체의 근거가 될 사회적인 동맹을 구성해내지 못했다. 촛불집회에 이질적이고 다양한 복수의 행위자들이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촛불운동은 ‘박근혜 퇴진’이라는 공통 구호로 한정됐고, 페미니즘, 노동, 성소수자 등의 행위자들의 목소리를 제한했다. 퇴진행동 역시 이들 소수자에 대한 박해나 혐오행위로부터 이들의 존재와 목소리를 단지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서,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 이상의 다양한 쟁점들을 끌어안고, 87년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확대하고 급진화하지 못하였다.

결과를 놓고 보면, “박근혜 퇴진”이라는 단 하나의 공동의 프레임으로 운동의 구호를 좁힘으로써 촛불시위의 폭발적인 확대와 박근혜 퇴진(사실은 탄핵에 대한 시민적 합의)이 가능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좁혀진 프레임은, 촛불을 구성하고 있던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회행위자들과 사회집단들 간에 퇴진 운동을 넘어서 사회적 대안을 추구할 사회적 동맹의 구성 가능성도 차단했다. 박근혜 퇴진 이후 촛불은 뿔뿔이 흩어지는 모래알 같은, ‘성긴’ 주체였던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2016년 촛불이 큰 덩어리의 대문자 계급, 시민, 국민이 아니라 모호하게 걸쳐 있는 복수성의 주체인 ‘촛불시민’으로 호명된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사회적 이해들과 사회집단들로 분기되고 분열돼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회운동이 제도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해도, 여러 부문 사회운동들의 제도화의 수준 혹은 민주주의의 포섭 정도는 다양하고, 여전히 심각하게 배제된 사회집단들도 있다.¹⁸⁾

그러므로 과연 어떻게 이들 복수의 이질적인 촛불시민들이 촛불 이후에 분열하고 분기하면서 자신들의 미완의 혹은 외치지 못한 목소리를 분출할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촛불 이후의 정세와 87년 체제의 전환 가능성을 가늠할 중요한 열쇠일 것이다.

18) 권영숙, “시민혁명의 뒤안”, 《경향신문》, 2016년 12월 13일 자.

2) 집합행위 레퍼투아르: 어떻게 탄핵은 가능했는가?

제도정치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집합행위 레퍼투아르와 관련해서도 2016년 촛불은 매우 특이했다. 거리의 정치는 제도정치와 상호 길항적이면서 제로섬게임의 한 축을 이룬다고 보는 것이 사회운동론의 지배적인 시각이다.¹⁹⁾ 하지만 2016년 퇴진 운동과 촛불시위의 경우는 법제도질서와 타협하면서 대규모 항의시위 혹은 대중동원을 확대해나갔다. 기본적인 동원구조는 토요일 주말의 집중 대규모 동원 전략이고, 집합행위 형태는 ‘촛불’을 손에 드는 비폭력 평화시위였다. 즉 폭력적인(violent), 혹은 적대적인(confrontational) 집합행위가 아니라 제도적인 집합행위였다. 대부분의 시위대는 법치와 공안질서의 ‘선을 넘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현했고, 집회 주최자인 퇴진행동 역시 그 선을 넘도록 독려하지 않았다.

이는 단지 제도정당뿐 아니라 검찰, 경찰 등의 공안기구와 법원 등 사법기구들도 중요한 행위자로 자리 잡도록 만들었다. 혹은 법원 등 사법기구가 ‘반행위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자로 등장했기 때문에 제도적인 집합행위가 유지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과연 무엇이 우선일까? 한마디로 공안 및 사법기관들은 22차에 걸쳐 열린 토요 촛불집회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러나 공공연하게 드러난 주요 행위자 중 하나였다. 특히 법원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촛불들이 박근혜 퇴진을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압박하는 “청와대로!”라는 구호를 현실화시켰다. 즉 집회시위 반경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수용 결정은 어떻게 법원이 촛불시위를 매 주말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박근혜 퇴진’이라는 타깃을 향해 물리적·공간적으로 접근시켰는가를 보여준다. 처음에 청와대 900미터 앞까지, 이어 청와대 500미터 앞까지, 그리고 또 청와대 200미터 앞까지, 그리고 또 청와대 150미터 앞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청와대 앞 100미터까지 시위대의 근접을 허용한 것은 바로 법원이었다. 2016년 촛불시위는 의문의 여지 없이 사법권력에 의존한 촛불시위의 동원이었다. 그리고 이번만큼 운동의 제도화 및 정치의 사법화가 가시화된 예가 없었다.

19) 사회운동과 제도정치의 제로섬 관계는 Goldstone(ed.(2003)의 다양한 논문들을 참조

가정하건대 법원의 수용이 없었더라면 과연 촛불시위가 이렇게 규모 면에서 확산됐을 수 있었을까? 비폭력·비무장 평화시위로 촛불을 들기만 한 시위대가 과연 청와대 앞까지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는 박근혜 퇴진의 방식, 혹은 재민주화의 양식 때문이기도 했다. 즉 ‘시민적 타협’에 의한 ‘거래로서의 민주화’가 이런 집합행위를 필연적으로 만들었다. 201년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일어난 촛불시민들의 경우 절대 차벽을 넘어가거나 4·19혁명 때 경무대 담장을 뚫고 들어가 이승만 대통령의 허야를 요구했던 것 같은 집합행위는 아예 정치적 선택지에 있지 않았다. 촛불시민은 제도정당들이 미덥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한 국회 탄핵소추 결의를 수용했다. 촛불의 동원과 지지·엄호에 힘입어 제도적인 탄핵 절차는 2016년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과 3개월이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거치면서 마무리됐다.

이것은 2016년 퇴진 운동 내에 먼저 촛불시위가 지배적인 정조 및 집합행위 레퍼투아르가 되고, 이어 ‘촛불시민’이 퇴진 운동 내에서 누구도 거역하지 못하는 일원적이고 통일적인 주체, 특권적인 주체로 탄생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한마디로 스스로를 주체화하면서 또 스스로의 행위를 제도적으로 순화하면서 이를 ‘시민 됨’으로 간주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바로 ‘촛불 시민’이었다. 즉 통제하면서 통제되는, 통치하면서 스스로 통치되는, 지배하면서 지배되는 시민. 사실은 이것이 바로 민주공화국의 ‘국민 주권’의 실체이기도 하리라.

한마디로 2016년 촛불은 반제도적이지도 반운동적이지도 않았다. 이것이 바로 모든 행위자가 ‘원-원’하는 전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검찰, 법원 등의 적폐를 눈감은 채 모든 적폐청산은 박근혜 적폐로 제한되거나 이후로 미뤄졌다. 한마디로 적폐의 기본 핵심 구조 안에서, 그 구조의 조력을 받아 진행된 탄핵의 완성이었다.

3) 구호와 프레임: 민주공화국과 국가의 정상화

촛불시위를 지배한 구호는 “민주주의 회복”, “박근혜 퇴진”이었다. 한마디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망가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수호하지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촛불은 체제를 수호 혹은 보수하지는 운동이었다는 것을 구호 그

자체가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것 외에는 모두 주변화되었다.²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문제의 진단에 있어서 가장 큰 위력을 떨친 구호는 “이게 나라냐”였고, 세월호 참사 때로부터 외치기 시작한 “국가는 없었다”라는 구호가 다시 등장하였다.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성의 회복을 통해서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 국가의 변혁과 전복을 꾀하지는 것이 아니라 실종된 국가 기능을 회복해 달라는 시민적 요청이고, 적극적으로는 시민의 부름에 국가답게 답하라는 계시이다. 국가와 시민 사이의 사회계약적인 관계를 근대 국가의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지는 담론으로 응집되었다. 그런 점에서 2016년 퇴진 촛불의 구호들은 국가 전복이나 국가 해체적인 담론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국가주의적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²¹⁾

흔히 정치사회학에서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가기구가 맡겨진 자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실패한 국가(failed state)’라는 개념으로 정리하는데, 바로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에서 외쳤던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와 흡사하다. 흥미로운 사실은 ‘실패한 국가’ 논쟁은 박근혜 퇴진 운동이 벌어지던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 오바마 정부 이후 트럼프 새 정부를 둘러싸고 등장하기도

20) 박근혜 퇴진 외에 의제들 간의 차별성을 보자면, 박근혜 퇴진 구호 다음으로 부각시킨 슬로건으로는 박근혜 정부하에 벌어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박근혜 정부하 경찰폭력에 희생된 백남기 죽음에 대한 항의 등이었다. 이 두 가지 요구들을 제외한 나머자들, 즉 미군의 사드 배치, 비정규 노동, 노조 탄압, 여성 젠더, 성소수자 등의 요구와 슬로건은 줄곧 주변화되거나 에피소드로만 간주되었다.

21) 한국의 촛불운동 동학은 그 과정에서 이런 일반성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재된 강한 ‘정상성’ 담론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좀 더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 국가주의적 성격과 사회 ‘보수’적인 혹은 ‘사회방위’적인 보수적 운동 담론 말이다. ‘헬조선’ 담론 역시 변혁적이라기보다는 정상성의 담론에 더 가깝다. 이와 관련해 잭 골드스톤(1991)은 혁명을 설명하면서 ‘이데올로기’와 문화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이데올로기와 문화가 혁명적 상황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국가기구의 와해 이후 권력투쟁과 국가의 재구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한국의 박근혜 퇴진 ‘촛불’이 보였던 ‘비폭력시위’ 담론과 검찰 및 법원 등 국가장치에 의한 ‘법치’에 대한 궁정, 정상국가화에 대한 의지 등은 그러한 이데올로기적인 특징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했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정권을 ‘실패한 국가’로 프레임하는 데 있어서 태평양 너머 한국의 정치 상황이 ‘전조’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실패한 국가’는 각기 층위가 다른 몇 가지 정의가 혼재된 것이다. 실패한 국가는 부패, 무능력 등으로 국가기구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기능적 비효율성(dysfunction)’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정치가 대리하고 반영해야 하는 사회 내부가 도저히 상호 공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것은 사회 내의 적대적 대립이다. 결국 국가의 역할은 그 효율성과 역량의 정도와 무관하게, 이 같은 사회적 적대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적대의 정치가 외부로 급진적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정치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²²⁾

문제는 사회적 적대 관리의 실패는 단지 박근혜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미 드러나 있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른바 ‘2개의 국민’ 담론이 등장했던 때가 김대중 정권 시절이었던 것을 상기해보라. 그때나 지금이나 사회적 적대가 정치적·사회적인 계급투쟁이나 이익 투쟁으로 전화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단지 박근혜 정부가 전임 정부와 다른 점은 도전 세력의 약체화 속에서 절대권력이 절대 부패하는 전철을 밟은 점이다. 지나친 권력 과신과 보수의 혁신 레토릭에 스스로 도취한 나머지, 그들의 권력이 초법적인 정당성을 지녔다고 간주하면서, 즉 정치적 권력을 분배하는 데 실패하면서 정치적인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그만큼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사유화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고, 국가 기능의 마비가 가져오는 사회적 불안정의 공포를 느끼게 하였다. 특히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보수파까지 우파 헤게모니로부터 탈주하게 한 것은 바로 이 국가 부재와 사회 해체에 대한 불안과 공포였다. 결국 누가 무너지는 사회를 방어할 국가를 맡을 것인가의 문제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과거의 발전 모델로는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유지될 수

22) 위의 두 문단은 권영숙, “실패한 국가와 정상국가”, 《경향신문》, 2017년 6월 27일자에서 인용했다.

없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렇다면 사회계약적인 국가, 정상국가, 실패하지 않는 국가는 어떻게 가능할까? 이 노선이 현실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서유럽 사회복지국가의 해체와 민주주의의 위기, 위험한 계급의 등장과 테러리즘을 보면 드러나고 있다. 이 점에서 서유럽에서 해체되기 시작한 ‘민주적 자본주의’와 ‘포스트 민주주의’ 논의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다음 절에서는 촛불과 87년 체제가 전 지구적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토론하기로 한다.

6. 전 지구적 민주주의의 위기와 한국의 87년 체제

1) 87년 체제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2016년 퇴진 운동과 촛불시위를 통해서 한국 사회는 다시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회귀했다. 혹은 더 좁게는 반박근혜 연합전선을 구성하였다. 이 연합전선은 좌우 통일전선도 아니고, 범보수 연합도 아니고, 실은 기묘하게도 좌파세력부터 《조선일보》와 반박근혜 우파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범박근혜 공동전선이었다.

하지만 이 전선으로 환원되지 않는 다양한 목소리들, 사회집단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은 반박근혜 연합전선 내부에 잠복하거나 억압된 목소리들일 뿐이었다. 이것이 2016년 촛불이 1987년 ‘6월항쟁’과 차이를 보이는 첫째 지점이다. 5절에서 이행의 양식 면에서 87년체제와 2016년 촛불의 연속성과 차이를 논했다. 이는 동원의 정치에서의 차이이기도 하다. 결국 이행과 동원의 방식이야말로 2016년 촛불운동이 가지는 체제론적 성격과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6월항쟁에서는 다양한, ‘반독재 민주화’ 전선으로 환원되지 않는 목소리는 거의 없었다. ‘민주주의’는 유일한 마스터 프레임으로 강력한 위력을 떨쳤고, ‘호헌철폐 직선제 쟁취 국민운동본부’(국본)으로 상징되는, 자유주의 정치세력과 밀접하게 연결된 재야운동과 청년-학생-좌파운동이 함께하는 ‘범민주 연합’이 세워졌다. 그러나 이번 촛불시위에서는 애초부터 다른 목소리들, 차별적인 사회 집단들이 다양하게 참가했고 그것이 반민주-민주주의 공동전선이 최대한 폭넓게

구성될 수 있었던 이유다. 하지만 역으로 다양한 목소리들이 산재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촛불시민’이라는 가장 큰, 집합적 대문자 주체 앞에서 소수화됐다.

둘째, 이는 앞의 비교 지점과 언뜻 모순되는 듯하지만, 6월항쟁에서는 국본 외부에 ‘반체제적인’ 사회운동 혹은 탈리의 정의대로 하면 사회운동이 아닌 혁명운동이 상당한 정도로 포진해 있었다. 그들은 국본에도 침투해 있었고 함께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그들만의 정치적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었다. 이런 운동 지형이야말로 6월항쟁 이후에도 변혁운동의 열기가 지속되고, 87년의 ‘정초 선거’에서 권위주의 구체제 세력이 집권하면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공안정국이 열렸을 때, 1991년 5월투쟁을 예비할 수 있게 하였던 한 요소이기도 했다.

반면에 2016년 박근혜 퇴진 운동에서는 ‘퇴진행동’으로 거의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집됐으며, 소수의 좌파 정치조직들이 외부에 있긴 했으나, 그들 역시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기획하거나 혹은 광장의 정치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성소수자, 페미니즘운동 등의 목소리가 독자적으로 꾸준히 터져 나왔다.²³⁾

반면 노동의 위치는 이중적이었다. ‘조직노동’으로서의 민주노총은 퇴진행동에 주요 단체로 참여했고, 조직노동이 참여한 3차 ‘퇴진행동 촛불’부터 촛불은 100만이란 결절점을 넘어서게 되는 등, 조직노동이 퇴진 운동에 기여한 바는 지대했다. 그 점에서 노동이 촛불에 가장 늦게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았다는 ‘무임승차’ 논리는 전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사실 왜곡이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조직노동은 촛불시위 과정에서 노동의 독자적인 의제를 주장하기보다는 반박근혜 연대에 충실히 따랐다. 또한 퇴진행동 외부에서 독자적인 노동 의제를 내세우는 실천들을 전개하지도 않았다. 이것이 조직노동이 자신이

23) 필자가 이 글의 초고를 완성한 직후에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의 성폭력 사건을 폭로하면서 한국판 ‘미투(#MeToo)’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는 돌출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난 촛불 과정에서 페미니즘의 목소리가 배경이 됐고, 그 이전과 이후의 여성혐오에 대한 문제의식, ‘강남역 여성 살해’에 대한 공분 등이 촛불에서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잠복됐던 에너지의 분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했던 주도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노동이 아니라 ‘촛불시민’으로 간주되고, ‘노동은 없었다’는 말을 듣게 된 배경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번 박근혜 퇴진 운동과 촛불시위 과정에서 혹은 그 이후에 1987년의 ‘노동자대투쟁’ 같은 노동계급의 독자적인 계급적인 진출이 터져 나오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미 ‘조직된 노동’이 가로막고 있는 한, 1987년 6월항쟁 이후 노동자대투쟁과 같은, 노동계급의 자생적인 분출은 억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하튼 2016년 촛불에서 좌파 세력부터 반박근혜 우파까지 포함하는 범박근혜 공동전선이 구축됨으로써 자유주의 세력은 스스로 중심이 되었다. 즉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중앙에 포진하면서 좌우의 세력 균형점에 위치하고, 그럼으로써 자유주의 헤게모니를 구사할 수 있는 위치에 섰다. 이와 관련 필자는 민주화 이행 이후 정치 과정을 분석하면서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자유주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우파를 견제하여 정치적 민주주의의 지체를 해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도좌파 혹은 좌파를 제도 내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자신을 중심화하는 것이야말로 자유주의 세력에게 가능한 개혁정치 프로젝트라고 진단한 바 있다. 이 방식일 때 자유주의의 노동 포섭, 즉 자유-노동 동맹(lib-lab coalition)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한국의 자유주의 세력은 그런 경로를 택하기보다는 자신의 정당 좌측의 모든 정치적 대안구조를 봉쇄하고, 오히려 우파와의 지배권력 분점 혹은 나아가 ‘동거연합’을 구사함으로써 구체제 세력의 생존은 물론 보수 헤게모니의 지배를 야기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자유주의 세력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이 내부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동맹 구축에 실패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환멸’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Kweon, 2008). 이것이 현재 민주주의의 후퇴와 보수 헤게모니의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한 것이다.

2) 전 지구적인 민주주의의 위기와 한국의 87년 체제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는, 광장의 정치가 제도정치를 긴박하여 제도정치의 변화 내지 중단을 초래하면서, 정치적 기회구조를 새롭게 열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1987년 6월항쟁의 연속선상에 있다. 하지만 그 쟁점 아니라 항의시위

사이클의 기원과 경과, 그리고 결과 역시 6월항쟁과 닮은꼴이기도 하다. 운동의 기원이 정치적 민주화의 지체에 대한 분노에서 출발한 ‘민주화’ 열망이라는 점도 동일하다.

이 점에서 한국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위기는 단지 박근혜 정권으로 한정되는 위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87년 체제의 전 과정 속에서 축적된 위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가 등장한 후 거의 붕괴 직전에 이르른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위기는 사실 두 가지가 혼재된 위기였다. 하나는 국정농단과 권력 사유화로 대의제 민주주의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다는 형식민주주의의 위기, 또 하나는 이왕 쟁취한 민주주의의 실패와 한계가 중첩된 위기다. 전자는 선거민주주의(plebiscitary democracy)가 위임민주주의로만 작동하면서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로서의 성격이 실종되거나 권력이 사유화돼 버리면서 일반의지를 대변하는 ‘대의제’의 실패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87년 체제 위기론’의 첫 번째 입장은 전자의 ‘정치적 위기’에 초점을 둔다. 예컨대 신진옥은 착근된 민주주의가 되지 못한 ‘결손 민주주의’의 한계가 대의제의 위기와 87년 체제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한다(신진옥, 2016). 또 최장집은 사회 제 세력의 이해를 대표하는 데 실패한 대의제로 인해 거리의 정치가 제도정당정치를 압도하면서 ‘정치 대표성의 위기’가 더욱 심화된다고 일찍이 진단을 내린 바 있다(최장집, 1998). 이들은 그러므로 87년 체제의 정치 위기 극복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과 제도를 개혁하고, 명실상부한 대의제 민주주의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과연 대의제의 제도적인 개혁, 즉 인민의 일반의지를 원활하게 대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 87년 체제의 민주주의 위기는 극복될 수 있을까? 과연 일반의지는 무엇인가? 대의제의 실패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대의’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건너뛰는 것이다. 정치사회와 형식적 민주주의의 시스템만 잘 구비한다고 해서 위임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 수준으로 격상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고 있는 정치사회, 나아가 ‘시민사회’의 모습이 결국 정치의 장소이기 때문이다.²⁴⁾

24) 대부분의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언설, 그리고 한국의 ‘87년 체제’에 대한 지적들은

87년 체제 위기론의 두 번째 시각은 신자유주의 이행의 결과에 주목한다. 즉 1997년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의 경제적인 ‘이행’이 가져온 결과에 주목하고, 이것을 위기의 진원지로 보는 시각이다. 정치적 민주화 이행 이후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적 이행 속에서 민주주의가 평등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시킨 체제로 전락했다는 것이다(손호철, 2017). 이 견해는 체제론적인 측면에서 한국 사회는 87년 체제에서 ‘97년 체제’로 이미 전환하였고, 경제적 신자유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의 괴리를 내적인 모순으로 바라본다. 이 견해에 대해서 필자는 내용적으로 동의하지만,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신자유주의의 관계를 상호 모순, 부조응, 괴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중 전환’의 과정이라고 보는 입장을 제출하고자 한다. 즉 정치적 자유화가 불가피하게 경제적 자유화를 조우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행과 경제적 이행을 단일한 ‘이중 전환’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1997년 이후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자기 한계를 노정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중전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87년 체제 자체의 문제로 부터 배태된 것이다. 정치적 민주화가 결국 시장의 자유와 국가개입의 최소화 등 자유방임적 경제자유화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두 개의 체제 담론 자체를 기각하는 입장에 서 있다.

그 결과는 바로 ‘노동 배제적인 자유주의적 민주화’라는 민주화 경로였다(Kweon, 2008). 노동배제적 민주주의하에서 노동계급의 시민권 확보는 지연됐고, 노동시장은 비정규직 중심으로 재편됐다. 그리고 이렇게 재편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이중 노동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나아가 2000년 비정규직이 본격화한 후 악화된 분배 불평등과 양극화, 노동 빈곤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는 무엇에 실패하였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민주주의가 ‘인민의지’를 혹은 ‘일반의지’를 대의하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하지만 그들은 사회적 적대가 정치화되기 전에 사회적 계급적 투쟁이나 이익을 둘러싼 집단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만다. 의지를 대표하기 전에 그 의지의 집단화, 혹은 사회적 의지로의 세력화가 먼저인데, 그것을 추상화한 ‘일반의지’로 표현하고, 그것이 정치적 대의제가 대의하지 못하는 것을 ‘대의제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적인 것은 대의제가 아니라, 무엇을 대의할 것인가이다. 즉 문제는 그 ‘일반의지’의 실체성이다.

과연 민주주의가 실패한 것은 대의제였을까? 민주주의는 왜 불평등을 감소시키지 못했을까? 민주주의 위기의 근원에는 민주주의가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혹은 실패를 예정했던 정치적 과정이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는 단지 한국적인, 혹은 일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적인 문제이며 나아가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는 전 세계 민주주의 위기 현상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국가의 비정상화나 국가 기능의 마비, 국정농단과 사유화 등의 현상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서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세게 비판받고 있다. 또한 이를 설명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위기’ 답론, ‘포스트 민주주의’ 답론이 대두하고 있다(크라우치, 2008; Streek, 2011).

이들 역시 민주주의의 실패에 주목한다. 그리고 제도정치가 대의제에 실패하는 이유는, 그리고 대의제가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이유는, 국가의 무능이나 제도적인 미비 탓도 있지만 그 이전에 ‘대의되지 못하는 대의’의 문제가 크다. ‘대의제’의 실패가 아니라, 무엇을 대의할 것인가의 문제가 공백으로 남아 있는 것이 문제다. 무엇이 대표되지 못했는가 문제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실패는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서유럽의 양상 역시 비슷한데, 민주주의를 배반한, 혹은 민주주의가 통제할 수 없는 자본주의하에서, 결국 자크 랑시에르의 표현을 빌자면, “민주주의에 반하는 대의제”를 목도하는 현실에 이르렀고, 민주주의는 역으로 “증오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랑시에르 인터뷰, 2017.3.31; 랑시에르, 2011).

그런 점에서 정치적 위기와 정치경제적 위기, 이 두 가지 위기는 중첩돼 있고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한편으로 불평등구조를 온존하고 더욱 강화하기만 하는 민주주의에 대해 가중되는 환멸, 다른 한편으로 대의제 민주주의가 형식화-사유화되고 금권정치로 전락하면서 민주주의(권위주의적 자유주의)에 대해 점증하는 증오는 한 궤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불평등한 자본주의하에서 부와 권력 독점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대의제 민주주의는 더욱 형식적으로 기동되고 일부 권력집단과 모리배들이 제도적 민주주의를 더욱 농단하며, 대의제로 표상되는 일반의지는 실종하고 마는 악무환적인 순환의 종착지에 지금 다다른 셈이다. 한국의 박근혜 정권은 전 지구적인 현상의 한가지 예일 뿐이다.

6. 87년 체제의 '이중 전환': 2016년 촛불은 87년 체제의 완성인가? 87년 체제 극복의 시작인가?

2016년 촛불은 87년 체제의 자기 한계로부터 야기된, 한국 민주주의의 중첩된 이중 위기를 해소, 아니 미봉하였다.

우선 2016년 촛불시위는 민주주의의 회복 운동이고 87년 헌정질서의 복원이 라는 의미에서 '재민주화'에 성공하였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후퇴한 민주주의를 87년 헌법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서 재민주화함으로써 87년 체제로 다시 회귀 하였다. 87년 체제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드러냈고, 더욱 공고화되었고, 자기완 성에 이르렀다.

나아가 2016년 촛불시위는 박근혜 정권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는 한국 민주화 이행 이후 30년의 온갖 '구조적 적폐'의 문제를 정권의 적폐 청산으로 한정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 점에서 이는 차라리 혁명이라기보다는 혁명을 예방하는 반혁명, 선제적인 혁명, 헌정질서를 중단하지 않고 질서 있게 이뤄진 재민주화라 는 점에서 '피를 흘리지 않는' 명예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엘리트 간의 거래와 시민적 타협을 통한 재민주화이 기도 하다.

하지만 2016년 '촛불혁명'으로 재민주화에 성공한 한국의 민주주의 앞에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노정된 불평등구조 위에 점차 저성장의 단계에 돌입한 '일자리 없는 성장' 국가가 놓여 있다. 그렇다면 과연 2016년 촛불로 다시 희생한 한국의 민주주의는 자신에 내재된 '민주적 자본주의'의 위기를 넘을 수 있을까? 아니, 한국의 민주주의는 과연 민주적 자본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회를 방어하는 사회방위국가이자 사회계약적 국가로 환골탈태할 수 있을까? 서구에서도 실패한 근대성 프로젝트를 대신할 '포스트 민주주의'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지금, 1987년 이행 이후 정치적 자유주의가 스스로를 좁게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물질적 한계, 즉 노동을 포섭할 물질적인 분배구조와 이익 분점을 할 수 없는 제 사회세력관계라는 문제는 여전히 촛불 이후 정치 앞에 놓여 있다. 민주주의의 환멸과 보수화가 우파의 집권을 용인했던 지난 9년을 지난 지금, 촛불의 힘은 단지 87년 체제를 회복시킨 것뿐 아니라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

는 것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말이다.

노동 배제적 자유민주주의하에서 새롭게 복원된 87년 체제는 또한 과연 민주주의의 환멸과 실패를 넘어설 수 있을까? 87년 체제하의 자유주의 정치를 복원하고 개혁정치를 가동하겠지만, 과연 민주주의 그 자체는 구원할 수 있을까 말이다. 무엇보다도 87년 체제로서 87년 체제의 위기를 봉합하는 제1단계의 기획은 성공했으나, 87년 체제 자체를 넘어서는 제2단계의 기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 말이다. 혹은 과연 87년 체제의 정치적 자유화와 경제적 자유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전환은 무엇일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의 정상화를 주장하기보다 국가의 존재를 더욱 근원적으로 질문하고, 둘째 대의제의 실패에만 초점을 두고 그것의 절차적 보완을 통해 대의제와 일반의지 사이의 부조응과 괴리의 문제를 해소하려 하지 말고, 사회적 배제와 통합의 정치 동학에서 배제되는 것들과 차별의 문제를 질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촛불 이후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여전히 배제와 통합의 정치동학은 작동하고 있고, 신자유주의와 한국 자유주의의 친연성은 잠복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며, 안보와 자본의 두 축은 ‘실패한 국가’가 아니라 사실은 ‘강한 국가’를 계속 작동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 역시 실천적으로, 즉 사회적인 힘의 분기와 이해들의 동맹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다. ‘촛불’이라는 공통분모하에 가려졌던 소문자 시민들, 다양한 사회적 범주들과 집단들의 목소리가 촛불 이후에 어떻게 터져 나오지 사회운동정치와 이에 대한 정치사회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2018년 2월 23일 투고, 2월 26일 심사, 2월 28일 채택)

□ 주요 용어

2016년 촛불시위, 이슈 캠페인, 항의 사이클, 운동정치, 다조직적 운동의 장, 87년 체제, 이중 전환

□ 참고문헌

- 권영숙. 2010. 『민주화 이행이후 노동운동의 주체구성의 변화와 연대정치: 노동이슈 캠페인에 대한 사건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가을 학술회의 발표문.
_____. 2016.11.15. “예방적 명예혁명”. 《경향신문》.
_____. 2016.12.13. “시민혁명의 뒤안”. 《경향신문》.
_____. 2017a. 『포퓰리즘 정치와 민주주의 위기』. 비판사회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문.
_____. 2017b. 『민주화 이행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적 전환과 시기구분, 1987-2006』. 《사회와 역사》, 115집 여름호.
_____. 2017.3.7. “제도권력과 광장권력”. 《경향신문》.
_____. 2017.6.27. “실패한 국가와 정상국가”. 《경향신문》.
- 김동춘. 2017. “촛불시위, 대통령 탄핵과 한국정치의 새 국면”. 《황해문화》, 2017년 봄호.
- 김종엽. 2005. “분단체제와 87년체제”. 《창작과 비평》, 33(4).
- 김학준. 2017. “빅데이터를 통해 바라본 촛불 민의: 탄핵으로 가는 길, 탄핵 이후의 소망”. 《황해문화》, 2017년 여름호.
- 김호기. 2007. “87년체제인가, 97년체제인가”. 《사회비평》, 36.
- 손호철. 2009. “‘한국체제’ 논쟁을 다시 생각한다: 87년체제, 97년 체제, 08년 체제론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5(2), 여름호.
_____. 2017. 『촛불혁명과 2017년체제』. 서강대학교 출판부.
- 박영균. 2008. “촛불의 정치경제학적 배경과 정치학적 미래”. 《진보평론》, 37, 가을호.
- 이국윤. “87년 체제를 극복할 새로운 정치의 모색: 박근혜 탄핵 결정의 역사적 의미” 《황해문화》, 2017 여름호.
- 임운택. 2015. 『권위적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에 민주주의 회복의 전망』. 《경제와 사회》, 106호, 여름호.
- 신진욱. 2016. “한국에서 결손민주주의의 심화와 ‘촛불’의 시민정치”. 《시민과 세계》, 29호.
- 최장집. 1996.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출판사.
- “고집불통 독재 모습… 대통령 아님 선언”, 《오마이뉴스》, 2013년 11월 22일 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

- Adler, Glenn and Eddie Webster. 1995. "Challenging Transition Theory: The Labor Movement, Radical Reform, and Transition to Democracy in South Africa." *Politics & Society*, Vol.23, No.1. pp.75~106.
- Balibar, Etienne. 2017. "The Idea of Revolution: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at the Center for Contemporary Critical Thought, Columbia University(강연문), p.6.
- Barkan, Steven E. 1984. "Legal Control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 pp.552~565.
- Bermeo, Nancy G. 1997. "The Myth of Moderation." *Comparative Politics*, 29(3).
- Dahl, Robert A. 1998. *On Democracy*. Yale University Press.
- della Porta, Donatella and Herbert Reiter. 1998. *Policing Protest: The Control of Mass Demonstrations in Western Democracies*, Minnesota University Press.
- Evans, John H. 1997. "Multi-Organizational Fields and Social Movement Organization Frame Content: The Religious Pro-Choice Movement." *Sociological Inquiry*, 67(4). pp.451~469.
- Gamson, William A. and David S. Meyer. 1996. "Framing Political Opportunity." in Doug McAdam,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eds.).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ldstone, Jack. 1980. "Theories of Revolution: The Third Generation." *World Politics*, 32(3).
- Goldstone, Jack A.(ed.). 2003. *States, Parties, and Social Movem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ipsher, Patricia L. 1998. "Democratic Transitions as Protest Cycles: Social Movement Dynamics in Democratizing LatinAmerica." in David S. Meyer and Sidney Tarrow(eds.). *The Social Movement Society: Contentious Politics for a New Century*. Rowman & Littlefield.
- Huber, Evelyne, Dietrich Rueschmeyer and John D. Stephens. 1997. "The Paradoxes of Contemporary Democracy: Formal, Participatory, and Social Dimensions." *Comparative Politics*, 29(3).
- Huntington, Samuel P.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 Centur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Koopmans Ruud and Paul Statham. 1999. "Political Claims Analysis: Integrating Protest Event and Political Discourse Approaches." *Mobilization*, 4. pp.203~219.
- Klandermans, Bert. 1992. "The Social Construction of Protest and Multiorganizational Fields." in Aldon Morris and Carol M. Mueller(eds.).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Yale University Press.
- Kriesi, Hanspeter. 1995.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of New Social Movements: Its Impact on their Mobilization." in J. Craig Jenkins and Bert Klandermans(eds.). *The Politics of Social Protest: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tates and Social Movements*. UCL Press. pp.167~198
- Kweon, Young-Sook. 2008. *Liberal Democracy without a Working Class?: Democratization, Coalition Politics, and the Labor Movement in South Korea, 1987-2006*. Columbia University, Diss.
- Luebbert, Gregory M. 1987. "Social Foundations of Political Order in Interwar Europe." *World Politics*, 39-4. pp.449~478.
- Markoff, John. 2004. "Contention and the Troubled History of Democracy." Presented to the Tri-Campus Workshop on Contentious Politics Fernand Braudel Center, Binghamton University.
- McAdam, Doug and Fernandez, Roberto M. 1988. "Social Networks and Social Movements: Multiorganizational Fields and Recruitment to Mississippi Freedom Summer." *Sociological Forum*, 3-3, pp.357~382.
- Meyer, David S. and Suzanne Staggenborg. 1996. "Movements, Countermovements, and the Structure of Political Opportun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01, No. 6, May. pp.1628~1660.
- O'Donnell, Guillermo. 1992. "Transitions, Continuities, and Paradoxes." in Scott Mainwaring, Guillermo O'Donnell and J. Samuel Valenzuela(eds.). *Issues in Democratic Consolidation: The New South American Democrac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pp.17~56.
- Przeworski, Adam. 1986. "Some Problems in the Study of the Transition to Democracy." in Guillermo O'Donnell, Philippe C. Schmitter and Laurence Whitehead(eds.).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Comparative Perspectives*.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Rucht, Dieter and Ruud Koopmans. 1999. "Protest Event Analysis." *Mobilization*, 4(2), entire issue. pp.123~255.
- Skocpol, Theda. 1979.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and Ch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now, David A. and Robert D. Benford. 1992. "Master Frames and Cycles of Protest." in Aldon D. Morris and Carol McClurg Mueller(eds.).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Yale University Press. pp.133~156.
- Streeck, Wolfgang. 2011. "The Crises of Democratic Capitalism." *New Left Review*, 12.
- Tarrow, Sidney. 1993. "Cycles of Collective Action: Between Moments of Madness and the Repertoire of Contention." *Social Science History*, 17(2). pp.281~307.
- _____. 1996. "States and Opportunities: The Political Structuring of Social Movements," in Doug McAdam,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eds.),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Political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Cultural Framing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illy, Charles. 1984. "Social Movements and National Politics." in C. Bright and S. Harding(eds.). *Statemaking and Social Movements: Essays in History and Theory*.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p.297~317.
- _____. 2001. "Mechanisms in Political Process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4. pp.21~41.
- _____. 2002. "Event Catalogs as Theories." *Sociological Theory*, 20. pp.248~254.
- _____. 2007.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랑시에르, 자크. 2011(2005).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 허경 옮김. 인간사랑.
- _____. 2017.3.31. 인터뷰. "민주주의에 반(反)하는 대의제를 목도하다".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 <http://m.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7125>.
- 크라우치, 콜린. 2008. 『포스트 민주주의: 민주주의 시대의 종말』. 이한 옮김. 미지북스.

□ Abstract

Candlelight Movement Politics and the ‘Dual Transformation’ of Korean Democracy

Kweon, Young-Sook

This paper argues that the naming and/or defining of a social movement or protest events is a kind of struggle on ‘historical symbol.’ In this regard, the paper will reject the coinage of “Candlelight Revolution,” to be away from the romanticization and sanctification of the candlelight protest during 2016-2017 years. Theoretically built upon historical sociology and social movement studies, the paper defines the 2016 Candlelight Protest as an issue campaign and a protest cycle. The second part is focusing on the dual relationship between the movement politics of the candlelight protest and ‘the year 87 regime’s crisis. The crisis of liberal democracy, which almost collapsed after the emergence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s dual crisis in which two obstacles are complicatedly mixed. One is the crisis of formal democracy in which representative democracy is no longer functioning due to the privatization of the state power and system, and the other crisis is a crisis embedded in capitalist democracy itself, which is only self-limited within liberal hegemony and overlaps and develops in tandem with neoliberal economic transition. In that respect, the two crises are overlapping and tightly connected. The remaining serious question is whether the overwhelming power of the 2016 Caandlelight protest has not only restored the year 87 regime, but also can overcome the crisis of year 87 regime, to be savior of Korean democracy.

Key Words: the 2016 Candlelight Protest, issue campaign, protest cycle, social movement politics, multiorganizational movement field, The Year 87 Regime, dual transformation